

## “규제 만능시대”

李甲俊 / 충청남도건축사회 회장

by Lee, Kap-Joon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삶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자신의 후손들을 위하여 안락한 주거 마련에 정성을 기울여 왔다.

산업의 발전과 문화가 발달됨에 따라 ‘주’는 단순히 우리의 삶의 용기인 주거의 개념뿐 아니라 자기의 생활의 개척과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한 그릇으로 인식되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우리의 ‘주’의식에 소유의 개념이 더욱 강해지고 사회전반에 걸친 배금주의적 사고가 팽배됨에 따라 건축물을 재산증식의 방편이나 투기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본위의 시설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보니 인간 본연의 삶과 생활 양태를 벗어난 소유욕으로 얼룩진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고유한 건축예술을 창조한다는 의식은 희미하고 그저 재산적 가치로서만 저울질되어가고 있다.

국가 경제적차원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 비경제적인 원리만 흐르고 있다. 나라의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위정자들까지 경제정책을 좌우우돌하여 삶의 터전까지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기막힌 현실에 봉착되었다. 즉,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까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온 것이다. 또한, 왜곡된 경제구조는 사회의 흐름뿐 아니라 극단적 이기주의로 팽배되어 가고 있으며, 자신의 올바른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이다.

건축허가제는 민주사회의 고유의 권한인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건축허가까지 규제하는 것이 경제현실에 맞는 경제정책인지? 아울러 이러한 제도가 더욱 발전하다보면 대권마저도 규제하는 제도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염려된다.

90년대에 들어서 2년여에 걸쳐 8차례나 건축허가를 통결하였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아직도 중앙집중적 관료정치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정부가 매년초에 경제지표를 설정하면서 얼마나 미래를 보지 못하는 탁상곤론 행정이었단가! 건축허가제한조치는 건설경기 과열을 방지하고 원활한 건축자재 및 건설인력 활용을 도모한다는 정책이지만 과연 얼마나 국민을 위한 행정시책이란 말인가? 얼마전 정부는 전국 시도 부지사회의를

소집하여 주택물량을 배정하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졸렬한 행정인가!

건축허가규제조치를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경기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자 금년도 주택건설규모를 60만가구로 억제, 신축허가를 내주지말도록 하라는 지시였다.

이 때문에 배정물량을 초과한 대부분 지역에서 연말까지 신축허가를 묶어버린 것이란다.

건설경기 과열이 국제수지 적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 제조업체 인력난을 가중시키는등 부작용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처럼 무차별적인 건축규제가 마치 정부의 분별력 없고 졸속한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계와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는 틈만 나면 일관성 없이 건축규제와 완화조치를 남발하여, 그로 인해 부동산가격만 올려놓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다. 건설경기가 좀 과열될듯 하면 규제를 가해 위축시켰고, 이는 곧 공급부족을 초래 부동산가격을 인상시켰고, 그러면 또다시 완화조치를 시켜 그동안 억제되었던 공급물량이 일시에 쏟아져 또다시 과열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200만호 주택건설정책의 실현을 위한 건설경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부터 취한 규제조치는 그야말로 규제만능시대를 창출시켰다.

이 얼마나 편리하고 손쉬운 무차별적인 행정력의 남용인가.

이로인해 국민들은 물론이고 건설관련에 종사하는 수만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감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운영과 건설경기과열에 따른 정부의 고충은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없이 규제와 완화일변도의 단순행정의 행사로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관료사회의 소신없는 정책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건설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아울러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의 제시가 있어야겠다.